

정책참고자료

2016-11호

설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올여름 자연재난은 사전점검으로 대비한다	—————	4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강원 속초·횡성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	8
3	기획재정부		
	중앙·지방정부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협의의 장 마련	—————	10
4	교육부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성과평가 결과발표	—————	13
5	미래창조과학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빅데이터랩·K-CROWD 활용한 창업확산 및 중소기업 혁신선도	—————	17
6	문화체육관광부		
	한중, 정부와 민간 협력 강화로 한류콘텐츠 지킨다	—————	33
	정부와 지자체,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과 사후관리에 적극 나선다	—————	37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서비스 이용이 더 가까워진다	—————	43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중국 시장 수출 확대 나서	—————	47

8	환경부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지자체 7곳 선정	—————	52
9	고용노동부		
	내가 원하는 청년정책 다 있다. 한림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	62
10	여성가족부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	—————	66
11	국토교통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투자선도지구’ 공모시작	—————	82
12	해양수산부		
	나들이철,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단속한다	—————	85

1

국민안전처

올여름 자연재난은 사전점검으로 대비한다

-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8개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신속히 안전대책을 시행토록 하였다.

* 참여기관 : 국민안전처, 문화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문화재청, 산림청

-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와 31개 시·군·구 및 22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주민대피계획 적정성 등 행정준비 사항과 예경보시설 작동 등 현장점검에 대해 진행되었고,
-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 여름철 자연재해가 없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의식을 바로잡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점검결과 수범사례로는 당초 변압기 기준으로 산정한 배수펌프장의 계약전력을 사용설비전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본요금을 6천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경기도 남양주시와,
- 자체개발한 스마트폰 QR코드를 수방자재 창고 관리대장에 비치하여 현장에서 실시간 재고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대구광역시 등이 있으며 주요 수범사례는 전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 한편 미흡사항은 총 365건이 지적되었으며,

○ 이 가운데 배수시설 이물질 제거, 취약지역 인근 주민대피계획 보완 등 296건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에 정비토록 했다.

○ 또한, 예·경보시설 설치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확보 등 중·장기대책이 필요한 69건은 우기대비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한 뒤 세부계획을 지자체 등 소관기관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15일 이전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하면서,

○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5월말 민·관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중앙합동점검 결과 1부. 끝.

붙임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책임 기관별 사전대비 추진실태에 대한 중앙합동점검 결과임

□ 점검개요

- 기 간 : 2016. 4. 18 ~ 4. 22(5일간)
- 점검대상 : 17개 시·도, 31개 시·군·구, 22개 유관기관
- 점 검 반 : 5개반 61명(국민안전처 14, 중앙부처* 30, 시·도 17)
* 농식품부(5), 국토부(5), 환경부(5), 해수부(5), 문화부(3), 문화재청(2), 산림청(5)
- 중점 점검방향
 -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 관리실태 현장점검, 문제점 및 개선대책 도출
 - 상황관리체계 및 방재물자 동원체계 구축 등 사전대비 현황
 - 지하시설, 급경사지, 공사장 등 취약지역 예방대책 현황 등

□ 점검결과

〈 총 지적사항 365건 〉

- (상황관리체계) 전담인력 확보 및 실무자 편성 등 미흡(66건)
 - 시·군·구 24시간 상황전담요원 부재(부산중구) 등 전담인력 미확보 16건
 - 협업기능 실무반을 공무원만으로 구성(경기화성) 등 실무자 편성 15건
 - 방재시설물 등 재난관리시스템 미입력(울산북구) 등 정보공유체계 19건 등
- (인명보호대책)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등 미흡(50건)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카드 미작성(울산북구) 등 관리현황 23건
 - 예·경보시스템 설치예산 미확보(경남의령) 등 구축확대 미흡 10건
 - 예·경보시스템 경광등 미작동(경북김천) 등 운영·관리 실태 8건



권익위, 강원 속초·횡성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등 모든 공공행정분야 고충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와 횡성군에서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 '정부 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국민생활 속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과 연계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한편

5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진행한다.

- (취약시설관리) 취약시설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 미흡(77건)
 - 침수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부산강서) 등 침수방지대책 2건
 - 인근주민 대피계획 미수립(대전동구) 등 급경사지 관리실태 7건
 - 소하천 정기점검 미실시(제주서귀포) 등 소하천 안전관리대책 12건 등
- (방재물자동원) 수방자재 관리 및 민간협력 체계구축 미흡(45건)
 - 수방자재별 확보계획 및 응급복구장비 지정규모 미검토(전북장수) 등 11건
 - 비상근무계획에 방재단임무 미부여(울산북구) 등 방재단 활성화대책 16건
 - 지역구호센터 비상근무기준 미수립(부산강서) 등 구호상황관리 7건 등
- (예방홍보대책) 예방홍보 계획 및 예산확보 미흡(19건)
 -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미수립(대전동구) 및 예산미반영(광주) 4건 등
- (중앙부처 소관분야) 문화부, 산림청 등 점검결과(108건)
 - 우기대비 관련시설 자체점검 미실시(대전동구) 등 문화부 소관 10건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미비(전남광양) 등 산림청 소관 36건
 - 양수장 자체점검계획 미수립(여주 백신지구) 등 농식품부 소관 24건 등

< 수범사례 >

- (남양주) 배수펌프장 계약전력 결정기준 변경(변압기→사용설비전력)으로 펌프가동 전기요금 약 60백만원 절약예상(123→63백만원)
- (충북도) 道 내 시·군별 환경에 따라 자율방재단 활동분야 특화로 전문성 강화 및 인근 지자체 상호지원(보은 호우대비반, 증평 붕괴사고대비반 등)
- (대구시) 스마트폰 QR코드를 자체개발하여 수방자재 출납 관리, 참고별 QR코드대장을 비치·활용(현장에서 실시간 재고관리 가능) 등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지시 및 주요 수범사례 전기관 전파 : 4.29
 - 5.14일까지 단기대책 보완조치 완료, 중장기대책 우기전 응급조치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5.13
- 대규모공사장 등 민간전문가관계부처 합동 표본점검 실시 : 5월말

□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권익위는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1,706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650건(38.1%)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강원도 속초·횡성 이동신문고 세부일정>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횡성군
5. 19(목) 10:00~17:00 속초시청 별관 5층 대회의실 고성군, 양양군 참여	5. 20(금) 10:00~16:00 횡성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원주시, 홍천군 참여

3 기획재정부

중앙·지방 정부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협회의 장 마련 -기획재정부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5.12일(목),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17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사업 담당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여하였고,
-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실장 등 예산실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하여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하였음

< 지방재정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6.5.12(목), 09:30~17:2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자: (지자체) 17개 시·도 부지사·부시장, 주요사업 담당실장·국장, 예산담당관 및 실무자 등
- 주요내용: 1세션('17년 예산안편성 및 '16-'20 국가재정운용 방향 설명)
2세션(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와 지역 현장간 소통의 場으로,
 -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전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임
- 이번 회의에서,
 - 정부는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7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 '17년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핵심개혁 과제에 투자하는 한편
 -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설명
 - 또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퇴출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17년 개통)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설명
 - 지자체도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국고지원 사업 추진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해 갈 것이라고 공감대를 포함
 - 한편, 각 시·도 부시장·부지사, 예산담당자와 예산실 실·국장간 1:1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 470여건의 지역 사업을 기재부 예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기재부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금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되었으며
 - 특히,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4 교육부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성과평가 결과 발표

“ 성과가 우수한 계속지원 대상 대학 55개교 확정 ”
 “ 공정하고 엄정한 재진입·신규평가 실시 예정 ”

□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SCK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SCK : Specialized College of Korea

○ SCK 사업은 사회·산업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6년에는 총 2,972억원을 지원한다.

○ 사업 3년 차인 '16년에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특성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임을 사업 공고 시 안내하였다.

□ 중간평가는 ① 성과평가 ② 재진입·신규평가의 2단계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성과평가에서는 기존 사업 수행 대학을 대상으로 계속지원 대상 대학(상위 70%) 및 재진입·신규평가 대상 대학(하위 30%)을 선별하며,

○ 재진입·신규평가에서는 성과평가 하위 30% 대학과 신규진입 대학 간 비교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대학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중간평가 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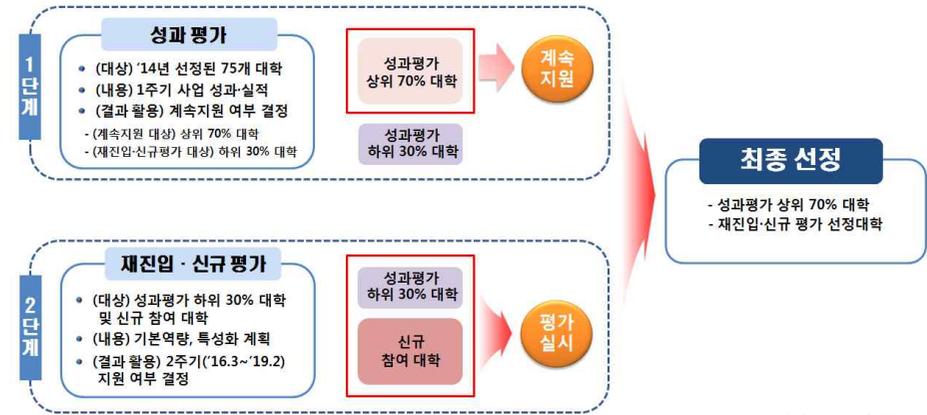
□ 중간평가 중 '14년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성과평가'가 완료되어 계속 지원 대상 대학 및 재진입·신규평가 대상 대학이 선정되었다.

○ 성과평가에서는 1주기* 사업의 실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① 1차년도 연차평가 30% ② 2차년도 정량평가 35% ③ 2차년도 정성평가 35%의 비율로 대학의 실적·성과를 평가하였다.

* 1주기 기간 : '14. 6 ~ '16. 2 (1차년도 : '14. 6 ~ '15. 2, 2차년도 : '15. 3 ~ '16. 2)

○ 그 결과 상위 70%는 계속지원 대상 대학, 하위 30%는 재진입·신규평가 대상 대학으로 선별되었으며 유형별 상위 70%, 하위 30% 대학 수는 다음과 같다.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



(단위 : 개교)

구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총계
	수도	지방	수도	지방			
계속지원 대상 (상위 70%)	5	10	10	21	3	6	55
재진입·신규평가 대상 (하위 30%)	2	4	3	8	1	2	20

* IV유형은 심층평가 실시(신규 선정 없음)

〈 유형 설명 〉

- I 유형(단일산업분야 특성화) : 특정산업과 연계한 1개 계열(70%) 중심 특성화
 - II 유형(복합산업분야 특성화) : 특정산업과 연계한 2개 계열(70%) 중심 특성화
 - III 유형(프로그램 특성화) : 대학 자율적으로 우수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IV 유형(평생직업교육대학) : 100% 모듈식 실무형 비학위·학위 교육과정 통합·운영
- * 계열 :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 성과평가에 이어 5월 말에는 재진입·신규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며, 재진입·신규평가를 거쳐 6월 중 SCK사업 선정 대학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계속지원 대상 대학들의 경우 2년동안 사업을 수행하며 NCS 기반 교육과정을 활용해 사회·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향후 재진입·신규평가 또한 성과평가와 같이 공정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엄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임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평가 실시를 위해 재진입·신규평가 대상 대학은 이미 안내된 바와 같이 5월 25일까지 재진입·신규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계속지원 대상 대학 목록(가나다 순)		
계속지원 대상 (상위 70%)		
I 유형 (수도)	경기과학기술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양미래대 삼육보건대 서울예술대	
	5개	
I 유형 (지방)	광주보건대 대구보건대 백제예술대 아주자동차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조선이공대 춘해보건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10개	
II 유형 (수도)	경인여자대 대림대 동원대 두원공과대 신구대	신안산대 안산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10개	
II 유형 (지방)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동주대 문경대	백석문화대 부산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충북보건과학대 한림성심대
	21개	
III 유형	동강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3개	
IV 유형	가톨릭상지대 동원과학기술대 목포과학대 서라벌대 창원문성대 총청대	
	6개	
총계	55개	

5 미래창조과학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빅데이터랩 · K-CROWD 활용한 창업 확산 및 중소기업 혁신 선도

- 89개의 창업·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37억원의 투자유치로 성과창출 본격화
- 1,010개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101개의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 기여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는 5월 9일(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한중호 센터장, 이하 '강원센터')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강원센터 1주년 주요 성과, (16.4월말 기준) >

- 89개의 창업·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37억 원의 투자유치와 295건의 법률·특허·금융 원스톱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과창출 본격화
- 1,010개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101개의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경쟁력 강화 선도
- 네이버의 빅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한 '빅데이터 랩(15.12)'과 유망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K-CROWD(케이 클라우드)(15.9)' 오픈하여 창업 및 기존사업 혁신 지원 중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향후계획

- 강원센터는 지난 1년 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을 중점 지원하며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운영 】

- 강원센터는 빅데이터 랩*을 구축하여 지난 10년간 축적된 네이버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인기 검색어의 트렌드나 지역별·업종별 이용자 관심도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데이터를 기반한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네이버의 빅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한 Data Lab(<http://datalab.naver.com/>)을 '15.12월 구축하고, 민·관을 망라하는 빅데이터를 탑재·분석하여 창업 및 기존 사업 혁신 지원
- 또한 BIGTORY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 Data Scientist 등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16.2월 1기 40명 교육 완료 후 '16.5월 2기(춘천 40명 및 원주 20명) 출범 예정

- 강원센터는 유망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K-CROWD*"도 작년 9월에 오픈하여 100여개가 넘는 공모전과 20개가 넘는 클라우드 펀딩**을 현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 '15.9월 온라인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K-CROWD(<http://kcrowd.kr>)' 1차 오픈 후 '15.12월 네이버의 '해피빈'[happybean, 가상머니인 콩(bean)으로 투자하는 공익형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과 연계한 클라우드 펀딩 기능 도입

** 창업, 사회현안 해결, 지역사업 등 총 124개 프로젝트 추진 : 클라우드 소싱 공모전 100건 및 클라우드 펀딩 24건

- 오프라인 영역에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조원정대(전문가 멘토단) 역시 의미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 작년 '평창군 동부 5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왔고, 올해에는 '청년이 돕는 청년 창업'이라는 콘셉트로 3개 업체**를 지원했다.

* 낙후한 지역 관광·유통 업소를 선정하여 디자인, 모바일 마케팅 등 지원 : '속세골 토종된장'의 경우 네이버 쇼핑의 모바일 산지직송 입점이후 월 평균 판매 수 4~5건에서 50건으로 10배 증가

** 평창의 '빵빵한 효주', 춘천의 '별빛산촌유학센터', 강릉의 '세손가락' 대상으로 브랜딩, 인테리어, 디자인, 마케팅 등을 지원 중

【 ICT기반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

- 강원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커머스 교육인 'MOCA'(모카)*와 1,000여건의 모바일 웹페이지 무료 제작 등 모바일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매출이 500% 증가하는 업체(나린뜰)***가 생기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 MOCA(MOBile Commerce Academy) :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모바일 마케팅 등 모바일 커머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740명 교육

** 모바일 웹페이지 무료제작(1,010개), 홍보동영상(101개) 제작지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50개사) 제작 지원, 지식쇼핑 수수료 지원(70개사) (16.4.30 기준)

*** 경영난에 시달리던 원주의 양계장 '나린뜰'은 판로 교육, 온라인 쇼핑 페이지 제작, 네이버 푸드윈도 입점 등의 지원을 받은 후 매출 500% 증가 및 주문 건수 5배 증가

- 강원센터는 농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 꼬마감자 재배업체 록아**는 작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창업 콘테스트에서 센터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전국 1위를 수상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 창농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16. 2월, 63개팀 참여, 5팀 선발지원 중으로, 선발된 네이처 앤드피플(목재소품제작)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목표액 776% 로 1,500만원 모금함

** 록아(주)는 벼 육묘장을 활용한 꼬마감자 재배 및 웰빙식품 개발 아이템으로 「2015 농수산 식품 창업 콘테스트」 “대상(1위) 수상”, 해태가루비(주), 농심(주)물품공급계약 체결하였고 '14년도 매출 44억, '15년도 매출 60억으로 35%이상 매출 증가함

- 또한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창농을 위해 스마트 창농 아카데미 (2회, 51명참여)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농식품벤처 창업지원 특화센터'가 센터에 개소되면 농업분야의 창업 및 혁신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 될 것이다.

- 지역전략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도 원주 사무소*(16.3월 개소)를

중심으로 원주시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협업을 통해 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할 예정이다.

* 올해 3월에 개소한 원주사무소는 강원센터(춘천) 분소로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타워에 위치하고 주요 역할은 고용존 업무와 지역전략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창업 및 중소기업 혁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 5의 '원주사무소 개요' 참조)

일자리 창출

- 강원센터는 강원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강원 센터의 분소인 원주사무소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고용존에서는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취업트레이너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 등의 인재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희망재단, 지역 산업계를 연계하는 허브역할 수행과 전담기업-공공기관-대학 간 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청년층의 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모바일 커머스, 드론분야의 전문가 양성 과정 등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주년 기념 행사

- 이날 행사에서는 최양희 미래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창목 원주시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강원 센터의 출범 1주년을 축하했다.

- 기념식에서는 △1년 성과보고 및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 고용확대를 위한 4건의 업무 협약식 등이 진행되었고

부대행사로는 △원주사무소 현판제막식 △우수사례 홍보전시존 △취업준비생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토크 콘서트 등이 마련되었다.

- 최양희 장관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년 한해 공들여 마련한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소싱을 활용하여 지역 전략 분야인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되고 신규 창업이 촉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 정부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관광, 헬스케어 등 지역전략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센터의 원주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중호 강원센터장은 “지난 1년간 지역 내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창조경제의 과실이 지역내 고용으로 선순환되도록 오늘 정식 개소한 원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강원센터 1주년 기념행사 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16. 5. 9.(월) 14:00 ~ 16:30
- 장 소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사무소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산학관(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1층
- 참석대상 : 약 250명 내외
※ 미래부 장관,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네이버 대표이사, 강원창조경제협의회장, 유관 기관장, 지역 창업동아리(단체), 보육기업 등
- 주요 내용 : 1주년 기념식, 원주사무소현판제막식, 성과전시투어, 창업토크콘서트 등

□ 세부일정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 1주년 기념식 (메디치창조경제홀)		
13:55 ~ 14:00	5' ▶ 식전 행사안내	
14:00 ~ 14:05	5'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도지사 등 주요인사 입장	
14:05 ~ 14:10	5' ▶ 국민의례 및 주요 내빈소개	전문MC
14:10 ~ 14:17	7'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성과보고(PT)	센터장
14:17 ~ 14:22	5'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축사	
14:22 ~ 14:27	5' ▶ 강원도지사 축사	
14:27 ~ 14:32	5' ▶ 원주시장 축사	
14:32 ~ 14:37	5' ▶ 네이버 대표이사 축사	
14:37 ~ 14:50	13' ▶ 업무협약식 ① 원주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지역인재 고용확대 * 강원센터-의료기기테크노밸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② 벤처창업 활성화 협업 * 강원센터-강원중소기업청 ③ 모바일커머스 교육센터 설치·운영 * 강원센터-네이버-중소상공인희망재단 ④ 청년기업가 정신교육 * 강원센터-청년기업가정신재단-네이버	협약관계자
14:50 ~ 14:55	5' ▶ 주요 내빈 기념촬영	
14:55 ~	▶ 폐회 및 우수사례 전시투어	
◇ 부대행사(중앙홀, 원주사무소내)		
15:00 ~ 16:00	60' ▶ 센터 우수(성공)사례 홍보존 운영 * 빅데이터존, K-CROWD, 모바일커머스존, 스마트강원패밀리, 창조원정대	중앙홀
15:15 ~ 15:20	5' ▶ 원주사무소 현판제막식	원주사무소 입구
15:30 ~ 16:30	60' ▶ 취업준비생 및 예비 창업을 위한 Talk Concert	원주사무소

□ 업무협약체결

MOU명	주요 내용
① 원주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지역인재고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발전 도모, 강원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역량 혁신(스마트팩토리), 의료분야 지역 청년 고용 확대 등 ○ 기 관 : 강원센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② 강원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활성화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국내외 경쟁력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 위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 창업자의 보육 지원 등 ○ 기 관 : 강원센터, 강원지방중소기업청
③ 모바일 창업지원 교육센터 설립 및 전문가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강원도와 중부권 중소상공인들의 모바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상설 교육센터 설립, 모바일 커머스 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교육 등 ○ 기 관 : 강원센터,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네이버
④ 강원도 창업기반 구축 및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 강원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창업 마인드 육성 교육 지원, 혁신센터를 통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력 육성 등 ○ 기 관 : 강원센터,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네이버

참고 2

대표 성공 사례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소싱/편딩 분야

빅데이터 분석의 마법, 뷰티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플러스메이(주)'



- 대표자 : 이 승 재 / ○ 창 업 : 2015.02.01.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한빛보듬관
- 업 종 : 화장품 추천 및 뷰티 정보 제공 앱 개발

◇ 빅데이터 통계분석 기술을 기반 화장품 추천 앱을 개발한 '플러스메이(주)'는 자금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야 아이디어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강원센터에 입주(2015.7월~)

◇ 2015.10월 네이버 Npac서버지원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서버 확보 및 네이버의 중요 자산인 뷰티 관련 빅데이터 제공받아 예정보다 빠르게 2016.02월 '퀵팁' 앱 서비스를 론칭

- 빅데이터를 분석 재구축해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 '16.02월 네이버 동반성장지원기업 선정 및 3월 네이버-센터-플러스메이 3자협약 체결로 전담기업과의 협력 등 시너지 효과 기대

클라우드편딩 700% 초과 달성, B2B에서 B2C로 개척! 네이처앤드피플



- 대표자 : 김 찬 중 / ○ 창 업 : 2015.7.22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한빛보듬관
- 업종/생산품 : 망고나무그릇, 목재소품, 가방

◇ 망고나무그릇 등 목재소품을 제조 판매하는 네이처앤드피플은 2015년 7월 창업 후 강원도에서 지역 기반으로 B2B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며 판로 개척을 고민하던 중 K-CROWD가 진행한 '2016 청년 창농 아이디어 공모전'을 보고 응모 장려상 수상

◇ 센터와 네이버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편딩 사업을 연계

- 클라우드편딩 오픈 하루만에 목표액의 130% 달성하며 목표액 776% 달성 후원액 1,500만원을 모금함으로써 B2C 사업의 첫 발판을 마련함

□ 창조원정대

<p>평창 남부의 낙후 농촌을 관광명소로 탈바꿈 동부 5리(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창조원정대 1기 프로젝트 ○ 대상지역 : 강원도 평창군 동남부 	
<p>◇ 평창군 동부5리는 전형적인 산골마을로 주요 관광지가 아닌 탓에 그간 개발과 개선의 기회가 없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원정대 1기는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진행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p>◇ 속세골 된장 브랜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700빌리지 펜션의 외부간판 및 진입로 안내판, 제품 패키지 등 디자인 개선과 모바일 마케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세골 토종된장'의 경우 네이버 쇼핑의 모바일 산지직송 입점이후 월 평균 판매 수 4~5건에서 50건으로 10배 증가 	

<p>고향의 특산물로 "강원도 빵"을 만드는 남매! 브레드 메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창조원정대 2기 프로젝트 ○ 대표자 : 빵빵한 효주, 달달한 승수 ○ 창 업 : 2016. 03. /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p>◇ 고향의 특산물인 썬메밀, 곤드레나물, 감자 등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건강한 빵을 만들고 싶어 창업을 꿈꾸던 최효주 양이 창조원정대 2기사업인 "청년이 돕는 청년창업"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p> <p>◇ 청년창업에 성공한 청년기업의 멘토 참여로 초기 점포창업 컨설팅부터 인테리어, 브랜드 네이밍 등 창업 전반에 걸친 멘토링과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로컬 베이커리 브레드메밀 오픈(2016.3월) - 오픈 1개월이 안 되는 동안, 각종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의 호의적 지지도상승. 지역대표상품으로 입지를 다지는 중(알펜시아 겨울 음악제 케이터링 지원), 첫째 매출 1억 원 달성 전망 	

□ 중소상공인 모바일 판로개척 분야

<p>네이버 스토어팜 입주 후 주문 500% 폭증 나린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표 자 : 박 귀 녀 / ○ 법인설립일 : 2010.08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 업종/생산품 : 구운란, 계란장조림 등 	
<p>◇ 경영난에 시달리던 원주 소재 양계장 '나린뜰'의 경우 자체몰을 오픈하여 운영도 하고, 소셜 및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를 진행하였으나 자체몰 운영 시 홍보가 어려워 매출이 부진했고, 소셜/오픈 마켓은 홍보가 용이했지만 높은 수수료와 마켓 측의 일방적 할인행사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p> <p>◇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판로개척으로 고민을 하던 중 센터의 판로개척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어 교육 이수 및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을 지원받고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팜 오픈 http://storefarm.naver.com/nrfar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네이버 푸드원도>산지직송에 입점 진행 - 네이버의 쇼핑수수료 면제혜택, 네이버 상품 홍보 지원 - 매출 500% 증가, 주문 건수 5배 증가, 네이버 스토어팜 매출액 월 평균 3,000만원 매출증대를 가져옴 	

<p>온라인 청년창업으로 부모님의 영세가업 혁신 푸르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표 자 : 이 민 서 / ○ 온라인 창업 : 2015. 9.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읍 ○ 업종/생산품 : 코다리강정, 제철농수산물 	
<p>◇ 딸 이민서는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부모의 사업이 힘들어 지자 고민하던 중 센터와 네이버가 함께 진행한 e커머스드림 청년장사꾼을 알게 되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용기를 내어 온라인 창업을 하게 됨</p> <p>◇ e커머스드림 청년장사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온라인 스토어 오픈 이후 센터에서 네이버와 함께 진행한 modoo!교육, 스토어팜 중급과정 및 법률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이후 네이버의 쇼핑수수료 면제혜택 및 푸드원도의 지역명물 섹션을 통한 판로 개척 및 홍보, 센터의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e커머스드림 경진대회에 참여해 장려상 수상 - 식품판매자로는 스토어점이 100개를 넘기기 어려우나 현재 170개를 넘는 스토어 점을 달성하였으며, 단골고객과 입소문으로 현재 월매출 600만원이 넘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 	

□ 스타트업 발굴·육성 분야

대한민국 대표 감자기업 탄생! - 작은 감자가 강하다 룝야(주)

HMR 꼬마감자



- 대표자명 : 박영민, 권민수 / ○ 창업 : 2011.01.12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 강원대학교 한빛보듬관
- 업종/생산품 : 농업 도소매서비스/감자, 종자 등

◇ 벼 육묘장을 활용한 꼬마감자 재배 및 웰빙 식품 개발 업체 ‘룝야(주)’는 2015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참여 당시 강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대상 수상.**

◇ 강원센터의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서 2015.12월 스마트강원 컨퍼런스 2015 참가 데모데이 지원, 1등 수상, 2015.12월 강원테크노파크 Fast-Track 사업 추천(사업화 자금지원)지원으로 **자금문제를 해결**, 2016.03월 센터와 스마트 창농 아카데미 **공동 운영 진행**

- 태태가루비(주), 농심(주)물품공급계약 체결하였고 ‘14년도 매출 44억에서 ‘15년도 매출 60억으로 35%이상 매출 증가
- 2016년 하반기에 꼬마감자를 테스트 생산하고, 연구개발을 더해 2017년에는 가공 제품을 출시 예정.

대학생 1인 창업에서 직원 6인의 성장기업으로! 디노웍스



- (대표자명 : 박 종 일 / ○ 법인 설립일 : 2014. 9. 1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1, 강원대학교 한빛보듬관
- 업종 / 생산품 : 모바일 지식 콘텐츠 서비스 업체

◇ 1인 창업기업으로 시작한 지식 콘텐츠 서비스 업체 ‘디노웍스’는 **창업 실패경험 있으며 (1회),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드형 도서요약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재창업 (2014. 9. 1.)**

◇ 강원대학교 창업동아리로 시작하여 센터 입주까지 성공. 강원센터 입주 7개월 만에 직원 6명 규모로 성장하며 강원 지역 창업리그 최우수상(‘15.9월) 수상.

- 강원센터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지원 사업에 선정(2015.9)되면서 UI/UX 전문가,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와 시제품 제작을 위한 마케팅, 디자인,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은 이후
- 총 직원 6명으로 규모를 늘리고 책과 강연을 통해 얻은 지식을 모바일 콘텐츠 담은 AWAKE를 출시하여 100개가 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1,300만부를 달성, 40여개의 출판사와 제휴하는 등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 ‘15년도 지원 이후 누적매출 2,900만원 달성

참고 3

창업 보육기업 현황 (25개사)

□ 입주기업(11개사)

연번	기업명	대표자	사업 내용
1	㈜엘메카	강정길	· 인공지능형 석션기 · 인공지능 자동 석션 시스템, 자동삼입
2	플러스메이(주)	이승재	·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추천 및 뷰티 정보 제공서비스
3	메디컬아이피(주)	박상준	· 생명을 살리는 환자 맞춤형 인체 장기 3D 프린팅 기술
4	아이티스타일	성민현	· 도플러 레이더 활용 자전거 측·후방 감지 후미등, 통신모듈 이용 스마트폰에 전송, ICT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5	세암	유기석	· 비콘을 이용한 실내네비게이션, 물체이탈감지 센서 및 시스템
6	VGC	장필재	· HTML5를 이용한 애플 플랫폼 · 웨어러블 건강체크 장비 개발
7	FBL	박선우	· 게임형 웹콘텐츠 제작 플랫폼
8	알리올라	전찬우	· 아동교육용 모듈형 장난감 · KIDDIY 어린이가 조립하는 가구
9	초코사이다	조경식	· 캐릭터 콘텐츠 · ‘삶의 재미’를 찾아 ‘취미’의 세계에 빠진 오리 DUCKOO 캐릭터활용 콘텐츠
10	룝야(주)	박영민	· 친환경 꼬마감자 개발(HMR)
11	디노웍스	박종일	· 모바일 카드형 지식 콘텐츠

□ 졸업기업(3개사)

연번	기업명	대표자	사업 내용
1	스마트토이	정태연	· 스마트완구를 활용하는 ICT기반 창의교육사업 및 파생상품 개발, 판매
2	오토레스트	허남수	· 지능형 헤드레스트
3	깨알생각	이철재	· 문구,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 가변형독서대 등 다수 제품

□ 입주외기업(11개사)

연번	기업명	대표자	사업 내용
1	햇츠고	이상윤	· GPS활동 국내외 여행자 동선 분석을 통한 안전 상태 송출 시스템
2	오이스터에이블	배태관	· IOT모듈을 활용한 재활용품 무인수거 장치 및 플랫폼 개발
3	비핏	이준	· 팀원간 실시간 경로 및 상황정보 공유가 가능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밴드
4	인필린지	서세찬	· 웹 브라우저 기반의 원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영상회의, 영상채팅 등으로 확장 가능)
5	카이트드론	장수영	· 산불 등 재난 감시용 카이트드론 제작
6	티지나인	우상진	· IoT기기 간 직접 연결을 위한 지능형 IoT컨트롤러 및 플랫폼
7	(주)비피소프트	장민호	· 손쉬운 화물경매 서비스 오라이(ALL RIGHT)
8	아마따	정희승	· 아마따(때맞춰 앱을 실행하는 앱)
9	렉트웍스	이동섭	· 지역 스포츠 관광 상품 사용자화 및 자동 가이드 시스템 개발
10	GARAG	김태용	· 빅데이터 분석알고리즘을 통해 스포츠 경기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플랫폼 개발
11	(주)임팩시스	신승렬	· 원격 3D프린팅 IoT 솔루션

참고 4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

□ 일반 현황

○ 위 치

- (본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한빛관·보듬관 2층(강원대학교)
- (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산학관(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1층

○ 전담기업 : 네이버

○ 법인설립 : '15. 4. 16. (전담기업 : 네이버) ※ 출범식 : '15.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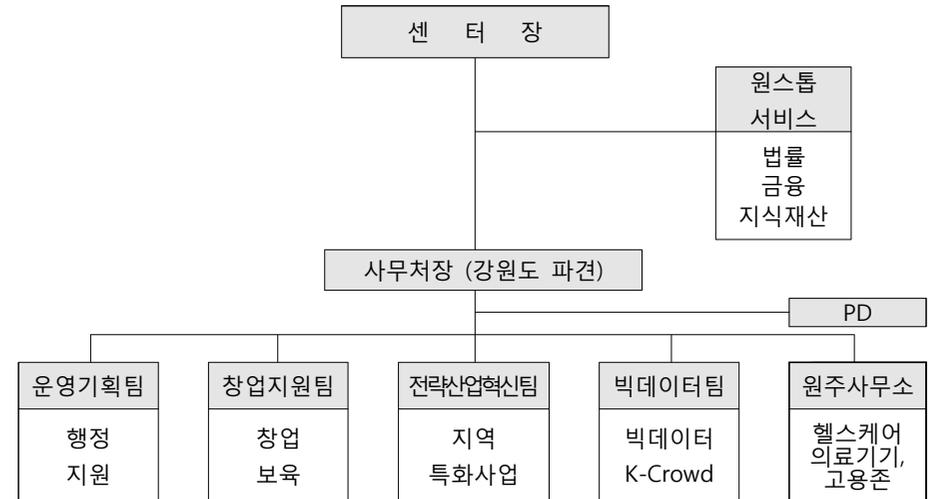
○ 비 전 :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소싱에 기반한 ICT 신산업 창출, 관광·의료기기·농업의 재도약 지원

□ 인력 및 조직 현황

○ 인 력 : 총 27명 (센터 13명, 파견 14명*)

* 파견 14명 : 강원도 5, 네이버 4, 원주시 2, 고용부 등 유관기관 3

○ 조 직 : 센터장, 사무처장, 4팀, 1서비스, PD, 원주사무소(고용존)



□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

- ① 빅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 ②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③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클라우드소싱 창업 지원 플랫폼

- ① 사업화 지원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K-Crowd' 고도화
- ② K-Crowd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③ 창조원정대의 전문 멘토링으로 사업화 지원

○ 지역산업 제도약

- ① 중소기업인 온라인 판로개척(O2O) 및 e-커머스 창업 활성화
- ②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위한 모바일 서비스(앱) 개발
- ③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 ④ 스마트팜 기반 농업창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참고 5

(강원센터 분소) 원주사무소 개요

□ 일반 현황

- 위치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산학관 1층, 248m)
- 운영인력 : 7명(채용2, 파견5)*
* 채용(2): 고용존 책임급 및 직원/ 파견(5): 원주시 2, 한국산업인력공단 1, 한국고용복지센터 2
- 추진 경위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15. 8.31.) 원주 분원 설치
 - 인력·공간 지원사항 등 원주분원 설치협약* ('15.11. ~ 16. 3.)
* 센터, 원주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제규정 개정('16. 1.)으로 원주사무소 명명
 - 원주사무소 구축 완료(~ '16. 2.19.) 및 운영 착수('16.3.~)

□ 추진 방향

○ 창업생태계 조성 및 전략산업 육성

- 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소싱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② 헬스케어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 ③ 지역 거점을 활용한 센터의 핵심사업 지원

○ 고용존 운영

- ① 기업-구직자 간 연결고리 확대 / ② 지역인재 현황 및 인력수요정보 가공·확산/ ③ 지역 네트워킹 활성화

□ 중점 추진과제

- ①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 ② e-커머스 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 ③ 기업 인력수요와 청년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DB 구축
- ④ 청년 구직자 대상의 취업 트레이너 역할 강화
- ⑤ 스타트업 및 전략산업 선도 인재 양성·공급

6-1 문화체육관광부

한중, 정부와 민간 협력 강화로 한류콘텐츠 지킨다

- 한중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 개최, 저작권 민간협력 양해각서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0일(화), 제주도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포럼 기간 중에 영상·음악 분야의 한중 민간교류회도 개최되며, 한국 음악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중 간 저작권 분야의 민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문체부가 중국 국가관권국[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중)와 중국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총경리 리우이(劉毅)]가 주관하는 '제12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5월 10일(화)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 속 한중 저작권 협력 방안 모색

'한중 저작권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 김철민 저작권정책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중 위원장, 중국 국가관권국 위즈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 인사와 방송·음악·출판 산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 2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콘텐츠 유통 환경 속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방송·출판·음악 등 장르별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한중 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정책 쟁점을 공유하고,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문체부가 중국 국가관권국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양국 정부 관계자 회의를 통한 저작권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이날 저작권 포럼과 함께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개최된다.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는 김철민 저작권정책관과 중국 위즈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이 참석해 양국 저작권 정책현안과 쟁점,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중국 내 음악콘텐츠의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고, 불법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저작권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음악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중 민간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 음악 권리자(JYP, SM, YG, 로엔, KT뮤직 등 포함 12개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쿠거우, 쿠위, QQ 등 8개사)는 중국 내 저작권 보호와 음악 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작년 5월에 체결된 방송 분야 민간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 방송권리자(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서비스업체(요쿠투도우, 바이두, 텅션 등 7개사) 간에 직통전화(핫라인)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단축(11일 → 2~3시간)되는 등 방송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즉각 차단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음악 분야에서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저작물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김철민 저작권정책관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저작권 포럼, 정부 간 회의, 민간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붙임 저작권 포럼, 정부간 회의, 민간협력 MOU 체결식 개요

1 제 12차 한중 저작권 포럼

- 목 적 : 한·중 간 저작권 법제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및 국제 저작권 보호·교역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증진(MOU 협력사업, '06년~계속)
- 주 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국가판권국
-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
- 일시/장소 : '16. 5. 10(화) 09:00 / 제주 하얏트리젬호텔 리젬시 불룸
- 참석자 : 정부·공공기관·신탁관리단체·학계·업계 등 100여명
※ 주요 참석자
- (韓國 측)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위원장, 정책(산업·보호)과 사무관 등 10여명
- (中國 측)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사장, 국가(지방)판권국 등 10여명
- 대주제 : 한·중 저작권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모색
- 세부 프로그램 * 한국어, 중국어 동시통역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30	30' 개회식	
[제1주제] 한·중 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및 협력방안		
09:30~10:10	40' 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양국의 저작권 법제 및 정책 현황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중국 국가판권국 송핑핑 사회서비스처장
10:10~10:30	20' 휴식	
10:30~11:20	50'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가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전략	한국 로디스컴퍼니 김주엽 대표 중국 관용과기 관용 총재 360회사 귀타오 부총감
[제2주제]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한·중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		
11:20~12:20	60' 콘텐츠 장르별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 (방송)	(방송) 한국 CJ E&M 황경일 부장 중국 텐센트 지양보 법무부 총경리
12:20~14:00	100' 오찬	
14:00~16:00	120' 콘텐츠 장르별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 (출판/음악)	(출판) 한국 한솔교육 양성환 본부장(중국법인장) 중국 진룽토티아오 시아용 편집장 (음악) 한국 음악콘텐츠산업협회 최광호 사무국장 중국 하이양음악그룹 시에위민 총재
16:00~16:20	20' 휴식	
[종합토론] 한·중 저작권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16:20~16:55	35' 종합토론 / 질의응답	(좌장) 한국 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
16:55~17:00	05' 포럼 마무리 및 폐회선언	

※ 프로그램은 추후 상황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

- 일시/장소 : '16. 5. 10(화) 10:30 / 제주 하얏트리젬시 호텔
- 참석 : 양국 정부 각 7명 내외(총 16명, 통역포함)
- (韓國 측)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위원장, 담당 사무관 등 8명
- (中國 측)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사장, 국가(지방)판권국 등 7명

3 음악분야 한중 저작권 민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일시 : '16. 5. 10.(화) 12:00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 종료 직후)
- 장소 : 제주 하얏트리젬시 호텔
- 참석 : 한국 음악권리자 -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체(OSP) 등

구분	대상 업체	비고
한국 (12개사)	JYP, SM, YG, 로엔 엔터테인먼트, KT 뮤직, 사운드 UX, The groove, IONE China, 음저협(KOMCA), 함저협(KOSCAP), 음실연(FKMP), 음산협(RIAK)	
중국 (8개사)	쿠거우(酷狗), 쿠위(酷我), QQ(騰訊), 시아미(蝦米), 왕이(網易), 바이두(百度), 음저협(MCSO), 음집협(CAVCA)	

○ 주요내용

- (핫라인 구축) 온라인 환경 하에서 권리자의 허가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조치에 대해 각 기관간 상호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
- (상시 교류) 정보 및 자료 상호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등

6-2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와 지자체,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과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선다

-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발표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에 대해 상설 안전점검단을 운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시설은 개·보수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문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 전문가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은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 및 디(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안전점검단은 점검 결과에 의한 안전상태 위험도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중 고위험 시설은 시설의 이용 제한과 사용 중지, 보수 보강 등을 명령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안전 재점검 등을 요구한다. 조치 요구 미이행 시설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 위험 시설에는 긴급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문체부는 시설 안전등급 등 안전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인증을 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의 예산은 삭감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체육시설도 개·보수 용자 지원과 인증환 판 부여 등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전국 7만 8천여 개의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 8. 4.)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비전 및 과제를 제시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인 재난 예방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체육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분 류	비 고
공공	전문·생활체육 21,931	22개	- 육상경기장, 축구장 등
민간	등록체육시설 496	3개	- 골프장(4474), 스키장(18), 자동차(4)
	신고체육시설 56,133	14개	- 당구장(22,456), 체육도장(14,076) 등
합 계	78,560		* 2014년 말 기준

* 직장 체육시설은 별도

그동안 정부가 체육시설의 확충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을 통해서도 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설별 성격에 필요한 운영이나 맞춤형 안전관리 등 사후 관리 부분을 강화하여 지역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인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중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체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부과

▲민관 합동으로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 시(C)등급 이하, 민간 등록·신고 체육시설, 육상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시설은 이용 제한 및 사용 중지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 역할 분담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중앙은 시스템 구축,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 중앙과 지방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체육시설에는 인증 부여, 건립 및 개·보수 예산 지원 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 구축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안전관리와 온라인 교육 등이 가능한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을 구축해,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16년에는 안전점검시스템 등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17년에는 대민서비스 누리집 구축 등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며, 3차 연도인 '18년에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과 외부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완성한다.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 이외에도 각종 스포츠대회 및 행사 개최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스포츠활동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 구호장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 처치 교육을 확대한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생활체육공원 등의 야외 운동기구를 대상으로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둘째,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종의 확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시설업자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계획 → 점검 → 평가 → 조치의 일관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문체

부는 이를 지원·평가함으로써 집행과 지원·평가를 분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소규모 체육시설 4개 업종(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민간체육시설의 95%인 53,823개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안전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가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의 시설 안전관리 전문 업체가 스포츠 활동과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은 스포츠 안전재단이 안전교육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표준화법」 등의 안전검사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스포츠용품과 용기구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지정함으로써 용품 및 용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한다.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구체화하고, 미규정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정하여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신규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등록 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시설 종류별로 안전·위생 기준의 구체화와 세부기준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물레이션 체육시설업, 스포츠클럽 등 청소년이용 체육시설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확대해 지정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사회인 야구장, 탁구장 등을 기타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번지점프, 썰라인 등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입법 전이라도 번지점프, 썰라인, 카트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조정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레저스포츠 시설 건설 관련 면허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체육시설 관리자와 실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체육 활동 중의 안전사고와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일부 교과목은 사이버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처치 요령, 안전사고 시 행동 요령 등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한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별로 규모와 건축 구조, 이용 계층, 이용자 수,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특별한 전문성과 지식이 없어도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및 조직, 안전점검의 주기와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체육 분야의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육시설과 용품,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산업 등 안전관리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CT)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등장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체육활동 시작 전 준비운동, 응급처치, 대피로 확보, 보호장비 착용 등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5분 안전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스포츠레저안전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와의 안전협약 체결, 아이디어 공모,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일반 이용자 기능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안전지도 보급,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 서비스 제공, 우수시설 공개, 안전 정보 제공 등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민간포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 관련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동영상과 웹툰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안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동으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정책 감시, 제안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 참여 영역을 개방한다. ▲스포츠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스포츠안전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용한다.

- * 민관 협업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단체, 안전 유관 기관, 민간단체, 프로단체 등 22개 기관이 참여
- **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16. 2. 4.~'18. 2. 3.)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그간 별개로 이루어지던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서비스 이용이 더 가까워진다 - 강원·경북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개소 -

《 주요내용 》

- ◆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전남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중 강원과 경북에 특화센터를 추가 개설
 - 특화센터는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자금, 판로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
 - ◆ 앞으로 중부권(서울·경기·인천·강원)과 충청·영남권에 위치한 창업기업도 각각 강원, 경북 특화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
 - 강원·경북 특화센터는 오는 5.17(화), 5.25(수)에 현판식을 갖고 각각 강원·수도권, 충청·영남권 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
 - 자금조달, 판로개척, 기술이전 등 특화센터가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참조(www.fact.or.kr)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원스톱 창업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남에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이달 중 강원과 경북 특화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 특화센터는 농식품 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농식품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창업보육 및 판로개척 상담 등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자금, 판로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앞으로 전남 특화센터가 지닌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중부권(서울·경기·인천·강원)과 충청·영남권에 위치한 창업기업도 각각 강원, 경북 특화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강원·경북 특화센터는 오는 5월 17일, 25일에 각각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금조달, 판로개척, 기술이전 등 특화센터가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특화센터를 통해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들이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고 기술·경영·자금 등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 특화센터 추가 개설과 더불어 올해 '제2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해 앞으로 농식품 분야 창업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참고 1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주요 내용

1 설치 목적

- 농식품 윈스톱 창업지원을 위한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 그간 분산 운영되던 농업분야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통합적·체계적인 기술, 자금, 판로지원 등 추진

2 설치 현황

구 분	호남권(기 운영)	중부권	충청·영남권
설치장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여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춘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구미)
설치날짜	2015. 6. 17.	2016. 4. 25.	2016. 4. 25.
관할지역	전남·광주·전북·제주	강원·경기·서울·인천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충북·충남·대전·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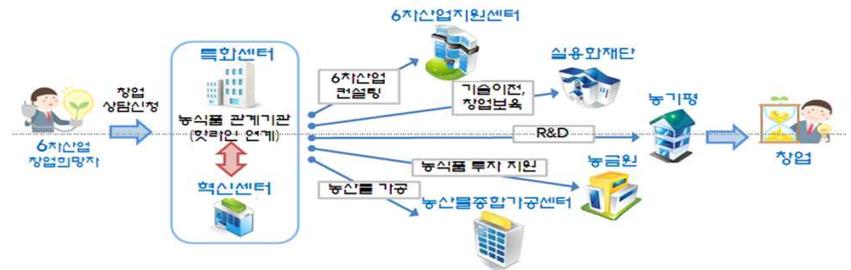
3 특화센터 추진 업무

□ 특화센터 고유 업무 수행

- (농촌현장 창업보육)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창업보육 실시
- (기술가치 평가업체 발굴) 기술은 있으나 자금마련이 어려운 업체를 발굴하여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크라우드 펀딩 업체 발굴) 창업초기단계 소액자금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콘테스트) 창업콘테스트 홍보 및 참가업체 발굴
- (지원사업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농식품 분야 창업 및 사업화 기업 DB확보, 상담을 통한 관계기관 지원 사업 연계
- (창업지원 매뉴얼 및 성공사례집 발간) 예비창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및 우수사례 책자로 발간

□ 농식품 관계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네트워크 구축

- 특화센터별 관계기관 특화센터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화센터별 관계기관과 협의회 구성·운영
 - * 농식품 관계기관(46개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T 기업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9개소), 농산물종합가공센터(30개소),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7-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중국 시장 수출 확대 나서 - 2016 「상하이식품박람회(SIAL CHINA)」 참가 -

《주요내용》

◇ 행사명 : 2016 상하이 식품박람회(SIAL CHINA) 참가

- 기간 : 2016. 5. 5(목) ~ 5. 7(토)
- 장소 : 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
- 참가규모 : 141개 업체 198부스(1,782㎡)
- 전시품목 : 신선, 인삼·건강, 음료·차류, 주류, 장류, 축산 등 농식품 전반
- 주요내용 : 김치·쌀·삼계탕·영유아식품·식재료 등 특별홍보관 및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지자체와 통합한국관 설치·운영 등으로 대중국 수출 확대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 최대 수입 식품시장으로 급부상중인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에서 개최되는 "2016 상하이 식품박람회(SIAL CHINA)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 주관으로 141개 농식품업체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7회째인 이번 상하이박람회는 매년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식품종합 전시회로 85개국 2,900개 업체가 참가하며 90개국 6

만명 이상의 바이어 및 참관객이 내방할 예정으로 한국식품의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무대로 평가된다.

- (통합한국관) 금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부처·기관간 협업'을 구현하여, 김치·쌀 등 신선식품, 면류, 스낵류, 차·음료, 장·소스류, 영유아·건강식품 등 수출 유망상품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지자체와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 관광공사·한국문화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농식품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한국 콘텐츠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 농식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김치·쌀 홍보관) 특히,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한·중 정상외교 성과로 수출길이 열린 "김치·쌀 홍보관" 운영으로 김치·쌀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함으로써 방문하는 바이어의 한국산 김치·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 금년 상반기 중 중국 수입 허용이 예상되는 '삼계탕' 특별홍보관 운영을 통해 삼계탕의 제조방법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본고장 삼계탕의 '진미'를 맛보여줌으로써 "태양의 후예"를 통해 중국 인들로부터 보양식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삼계탕을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 (식재료 홍보관) 또한,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현지 외식업체에 공급

가능한 장류, 면류, 소스류 등 대용량 식재료 제품의 특별홍보관을 운영하여 청정원, 샘표, CJ, 오뚜기, 해표, 사조, 삼양 등 한국 대표 식품브랜드의 대용량 식재료제품 약 200여종을 전시할 계획으로,

- 홍보관에 마련된 상담테이블에는 중국 전역의 외식업계에서 온 식재료 바이어들이 한국산 대용량 식재료 구매를 위한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홍보관에는 대용량 식재료를 활용한 불고기, 고추장떡볶이 등 다양한 시연·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상하이 식품박람회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 업체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세계 최대의 농식품 수요처인 중국은 소득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품질·안전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류 확산과 연계,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현지 수입·유통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 강화**하고,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한국 식문화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이 현지인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2016 상해식품박람회(SIAL CHINA) 참가 개요

1 박람회 개요

- 행사명 : 2016 상하이식품박람회(SIAL CHINA 2016, 제17회)
- 기 간 : 2016. 5. 5(목) ~ 5. 7(토)
- 장 소 : 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
- 규 모 : 127,000㎡
- 주 최 : COMEXPOSIUM
- 품 목 : 신선농산물, 냉동·캔식품, 주류, 육류 및 유제품, 기타 가공식품 등
- 성 격 :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바이어전문 식품박람회
* '15년 82개국 2,734개 업체 참가(내방객 6만여명)

2 한국관 개요

- 참가규모 : 1,782㎡, 198부스
- 참가업체 : 141업체
- 전시품목 : 신선, 인삼·건강, 음료·차류, 주류, 장류, 축산 등 식품 전반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 주요 행사 내용

-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지자체와 함께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한 국가 통합브랜드 홍보로 시너지 제고
- 최근 한중간 검역협상 타결 또는 타결이 예상되는 김치, 쌀, 삼계탕 등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특별홍보관 운영
- 급성장 중인 중국 외식업체에 공급가능한 대용량 식재료 제품 특별 홍보관 운영 등

구분	참가업체
차류	○ 코리아무역, 가보팜스, 에이치엔제이인터내셔널(주), (주)씨즈커피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주)에이치맥스, 초록원, (주)다정, (주)한미에프쓰리, (주)엔푸드, 농업회사법인 (유)미와미, (주)희창유업, 고려자연식품(주), 동우당제약(주), 오대산식품, 티젠
주류	○ (주)우리술, 하이트진로, 배혜정도가, 화요, 오비맥주(주), (주)국순당, 경원리큐르
장·소스류	○ 농업회사법인 (주)프롬웰, (주)강스푸드, (주)움트리, 신송식품, (주)상촌식품
면류	○ 청수식품(주), (주)삼립지에프에스, (주)한스코리아, 한일식품(주), 삼양식품(주), 농업회사법인 (주)백제
스넥·제과류	○ 성찬식품, (주)복음자리, 국제제과(주), 리뉴얼라이프(주), 삼광식품, (주)그로스, (주)청우식품, 울가나카, 농업회사법인 (주)안복자한과, (주)제이온, 농업회사법인 (주)하늘바이오, 내추럴초이스(주), 농업회사법인 (주)산들촌, (주)넥스처이원인터내셔널, 이와이엔(주), 대산후드
음료류	○ (주)삼양패키징, (주)팜메이크,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소올네이처푸드, 해태음료, 톨립인터내셔널(주), 동아에스티, (주)일화, (주)네이처셀, 태산무역, (주)현대에프앤비, 정식품, (주)다원, (주)힐링, 솔나라, (주)제이크리에이션, (주)위드오
인삼류	○ 한국금차도(주), (주)동진제약, (주)고철남홍삼, (주)동원고려인삼, 고려인삼연구(주)
건강부류	○ (주)이플글로벌, 남해보물섬마늘영농조합법인, 고려은단(주), 오순도순, (주)푸른친구들, (주)락토메이슨, 엔초이스, 농업회사법인 삼순푸드(주)
축산·유제품	○ (주)진한식품, (주)빙그레
신선	○ 아하식품, 농업회사법인 머쉬엠(주), (주)유니통상, (주)진현식품, 농업회사법인 윈스베리(주)
김치	○ 농업회사법인 (주)모아, 영주식품, 대광에프앤지, 농업회사법인 (주)평창후레쉬푸드, 농업회사법인 (주)다모
수산물	○ (주)효성푸드, 대창식품, 예맛식품, (주)광천김, 재원글로벌넷, 해서물산, 한성기업(주), 매일푸드, 해농식품,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기타	○ 제이엔에스글로벌, 농업회사법인 (주)영풍, 제주개발공사, 서강유업(주), 천혜식품, (주)양광에프앤지, (주)한양에프앤디, (주)제키스, 농업회사법인 (주)두리두리, 칠갑농산(주), (주)로가닉, 나라통상(주), (주)나루아토, 대상에프앤에프, (주)사용원, 후스타일, 아이케이지코리아, (주)참미푸드, 디케이식품(주), 농업회사법인(주)승화푸드, 밀원, 농업회사법인 대홍(주), (주)팔도비즈, 용궁식품, 영덕농수산영어농조합법인, 에덴식품 영어조합법인, 한라산성암영굴농원영어농조합법인, 태림상사(주), 영어조합법인 제인 등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지자체 7곳 선정

◇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서울 송파구·인천 남구·인천 남동구·광주 광산구·전북 장수군 우수지자체 선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 우수지자체 7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 등이다.
 - 이번 실태평가는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공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인 지자체의 환경감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평가는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 평가 결과, 2015년도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균 점검률은 97.2%로 나타났다.
 - ※ 2015년 전국 지자체 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794개소
 -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균 점검율 100%를 기록해 가장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99.9%, 경상북도는 99.8%로 뒤를 이었다.
 - 특히, 경기도는 2014년도 점검률이 74.8%에 불과했으나 2015년 점검률이 93.9%로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가 단속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10.8%로 2014년 8.6%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광역시 위반율이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게 조사됐으며,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24.1%), 부산광역시(21.3%), 대전광역시(21.2%)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는 2014년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업소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로 판단된다.
-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2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최대인 곳은 경기도 파주이며 1인당 441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인 곳은 부산 중구로 1인당 3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와 최소 차이가 약 150배에 이르러 단속 공무원의 적정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전국 시·군·구의 11%인 27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점검률, 위반율, 환경관리 홍보 실적, 위반내용의 중대성(고발 건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기초 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의 경우 환경관리실태평가 전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향후 타 지자체 환경관리의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환경부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환경관리와 단속방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업소별 가중치 부여기준,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결재자 인정범위 등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 일부 지자체의 홍보실적 부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산정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2015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201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 ◇ 환경관리실태평가(9개 지표)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우수 지자체 선발·포상 평가자료로 활용
- ◇ 광역단체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기초단체 서울 송파구·인천 남구·인천 남동구·광주 광산구·전북 장수군이 최우수 기관임

1 평가 개요

- (기간) 2016.1.22(금) ~ 3.24(목)
- (방법) 환경부 주관 타 시·도 공무원 참여로 교차 검증(전수조사)
- (항목)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분야	심사항목	비고
배출업소 정보관리 (2개 항목 20점)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10점)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10점)	환경부 자체검증
위임업무 관리·감독 (5개 항목 50점)	①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10점) ②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10점) ③ 환경관리 홍보 실적(10점) ④ 위반내용의 중대성(10점) ⑤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10점)	
배출업소 환경관리* (2개 항목 30점) * 정부합동평가 결과 활용	① 배출업소 지도·점검률(15점) ② 환경법령 위반률(15점)	지자체 교차검증

- (결과)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기초단체 서울 송파구·인천 남구·인천 남동구·광주 광산구·전북 장수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 평가 결과

□ 환경관리실태평가

- 17개 광역단체 중 특·광역시 경우 1위 세종, 2위 광주이며 광역도의 경우 1위 제주, 2위 경북임
- 전국 245개 시·군·구(시·도 본청 제외)의 경우 1위 서울 송파구·인천 남구, 3위는 인천 남동구임

- 특·광역시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지자체	세종	광주	울산	대전	인천

- 광역도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지자체	제주	경북	충북	경남	전북

- 기초 자치단체별(시·도 본청 제외) 순위(1~6위)

구분	1위	1위	3위	4위	4위	6위	6위
기초 지자체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	서울 동작구	부산 금정구

□ 정부합동평가(배출업소 점검률·위반율, 행자부 기재출)

- 전국 45,794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44,505.5개소 점검(97.2%) 결과 법령 위반업소 4,786개소(10.8%)로 전년 대비 증가*

* '14년 점검률은 87.6%, 위반율은 8.6%이고 특히, 점검률의 경우 경기도에서 전년 대비 약 25% 증가(74.8% → 93.9%)에 따른 결과임

3 평가결과 분석

□ 환경관리실태평가는 '특·광역시'가 '광역시도'보다 대체로 양호함

※ 점검대상 업소수가 적고 도시지역의 특성(지역민의 환경 민감도 높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관리실태평가의 가장 우수한 분야는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분야(9.6점)'이고, 가장 저조한 분야는 '환경관리 홍보실적'(5.1점)임('14년 3.1점 대비 소폭 상승)

☞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지자체 협조 공문 시달 등) 마련 필요

□ 정부합동평가의 경우 '12년부터 최근 4년간 점검률 및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함('13년 점검률 제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점검률	84.3	83.4	87.6	97.2
위반율	6.1	7.8	8.6	10.8

□ 항목별 평가·분석

○ (공무원 인력) 지도·점검 공무원 1인당 평균 약 42개소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경기도 파주시는 최대(441개소/1인)인 반면, 부산시 중구(3개소/1인)는 최소로 약 150배 차이가 나며, 대체로 경기도의 공무원 1인당 배출업소수가 많음(경기도 김포 406개소/1인, 경기 화성 298개소/1인 등)

○ (점검공무원 교육·훈련실적) 대부분이 지도·점검 관련 전문교육 등을 수료 하였으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정범위 축소가 필요함

☞ '16년부터는 교육실적 인정범위 축소(4시간→10시간)

○ (홍보실적)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자체의 홍보실적은 대체로 높았으나(5회/년 이상, 45개 지자체), 27개 지자체(전체 11%)의 경우 홍보실적이 전무함

○ (위반내용의 중대성) 141개 지자체(약 58%)에서 위반건수 중 고발건수가 20% 이상로 높게 나타남.

※ '14년 이후 무허가(미신고) 업소 집중단속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 (자율점검업소관리) 전국 배출업소의 24.1%(11,016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 39조제3항 의거 매년 자율점검업소의 20%를 선정 후 자율점검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지도·점검 실시

○ (환경감시네트워크) 시·도 본청의 경우 합동점검(환경청 및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은 1회/분기 이상으로 이루어지나, 시·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함

☞ 시·군·구의 합동단속 활성화 방안(지자체 협조공문 시달 등) 마련 필요

○ (점검계획수립의 적정성) 전반적으로 통합지도·점검계획 및 취약시기(야간, 갈수기, 휴일 등) 점검계획을 적절히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단속계획 등의 수립은 미흡한 실정임

☞ 기획단속계획 등 수립·이행의 경우 차별화된 점수 부여

○ (점검률) 전체 지자체의 점검률 차이가 거의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가중치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점검률은 2~4위와 약 0.3점 차이로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가 평가에 불리한 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가중치 부여기준 변경(점검 대상 업소 수 → 점검 업소 수)

○ (위반율) 도시지역인 '특·광역시'의 위반율이 '광역시도' 보다 높게 조사됐으며 특히 서울(24.1%), 부산(21.3%), 대전(21.2%)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1.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나, 최근 3년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 및 위반율의 추이를 볼 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점검률 및 위반율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점검률	83.4%	87.6%	97.2%
위반율	7.8%	8.6%	10.8%

※ 환경부 위반율 : '13년 28.9%, '14년 28.0%, '15년 30.3%

2. 환경부와 비교하여 지자체의 위반율이 낮은 이유는?

- 대부분의 지자체장은 환경규제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 지자체의 단속공무원이 환경감시 업무외 다양한 업무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불충분하여 형식적인 단속에 치중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감시조직, 인력, 장비 등의 감시역량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3.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대책은?

- 평가결과 실적이 미흡한(점검률 90%, 위반율 10%이하) 지자체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 배출업소 지도·점검 분야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단속기법 등을 공유토록하고 환경부와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도 지자체의 환경감시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평가 후 조치계획은?

- 점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실적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그간의 미비점인 “업소수별 가중치 부여기준” 등을 조정·보완하여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 평가시 나타난 일부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등의 홍보실적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또한, 금회 평가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지원시 증액하고, 금년 11월 배출업소 지도·점검 경진대회시에 정부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환경관리실태평가** : 2002년 지도·점검업무 지자체 위임이후 지자체의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를 포상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는 환경감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2003년부터 시행)
- **점검률** : 2015년 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비 같은 해 지자체에서 실제 점검한 사업장 비율
- **위반율** : 2015년 점검대상 사업장 중 지자체가 실제 점검한 횟수 대비 환경법령 위반 횟수 비율

“내가 원하는 청년정책 다~있다. 이방 저방 청년다방!”

-12일(목), 한림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2일(목) 강원도 춘천 소재 한림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번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기위해 마련한 연간기획 「**캠퍼스 커피트릭 투어**」행사의 일환으로서 『**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4.27)**』 발표 후 열린 첫 번째 행사다.
- 이날 행사에서 이기권 장관은 일일 바리스타가 되어 청년들과 함께 커피를 나누며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 상황과 개선방안을 들었다.
- 이 장관은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에 대해 다시 설명하며,
 -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다**”고 전하며, “수요자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 청년의 경우, **정보부족, 대중소기업 격차 등에 따른 구조적 미스매칭 문제해소**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지향점이라며
 - **공급적 측면에서는, 대학교육과 기업 간의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도록 『진로 지도취업지원 시범대학』, 재학 중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 등을 통해 조기 진로목표 설정과 체계적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 **수요측면에서는, 임금일자리정보 등 격차를 줄이고,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높일**도록 일자리 수요와 연계된 분야별 박람회 개최, 온·오프라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 * 워크넷 통합개편을 통한 일자리 포털 구축, 원스탑 전달체계 구축(시범지역 후 확대), 청년채용의 날 등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모델 신설, 저 소득 근로자 및 미취업 청년의 대출상환 유예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행사의 경우, 『이동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디딤돌 등 훈련을 상담하고 채용수요가 있는 지역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채용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 (이동고용지원센터 운영) ①취준생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모집, ②청년취업아카데미 훈련생 모집, ③직업심리검사 및 구직신청 등 상담 등

* (현장면접 기업) (주) 네오플렉스(16년 채용예정 20명) 등 청년친화 강소기업 2개소

□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한림대학교의 「장단기산학협실습」처럼 일경험과 학점을 연계하여 재학 중에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접해보는 기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서로에 대해 탐색하며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의미있는 변화와 역할이 중요하며, 청년들이 ‘N포세대’가 아니라 MD(More Dream)세대가 될 수 있다면 대학총장 등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가 청년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결뿐만 아니라 취업한 후에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 이기권 장관은 귀경길에서 지역 청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바디텍메드(주)*를 방문, 지역 내 청년을 다수 고용하게 된 계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격려했다.

* 강원도 춘천소재 (대표) 최의열, (전체 근로자 270명중 90여명이 지역 청년근로자이며, 한림대에서 인큐베이트하여 성공한 향토기업으로 12년도에 비해 근로자수 2개 증가)

참고1 타임 테이블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행사 1>		
사전행사 12:30~	12:30 ○ 커피트럭 오픈(90')	* 진행: 이벤트 MC (학생복지관)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13:30~15:30	13:30~14:00 ○ 청년고용정책 설명회(30')	* 진행: 춘천고용복지*센터소장 (산학관)
	14:00~14:05 ○ 참석자 소개 (5')	* 진행: 사회자
	14:05~14:15 ○ 인사말씀 (10') - 총장 및 장관 인사말씀	* 장관, 한림대 총장
	14:15~15:10 ○ 토크콘서트(55') - 취업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15:20~15:30 ○ 이동고용지원센터 및 커피제공 및 청년격려 (10')	
이동고용센터 운영지원 12:30~17:00	○ 이동고용센터 운영 지원 - 취준생 대상 취성패 및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운영기관) - 청년정책 홍보,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 및 구직신청 등 지원(춘천센터) ○ 바리스타 이벤트 - 커피트럭 계속 진행(75')	* 진행: 춘천센터 및 본부 직원
<행사 2>		
사업장 방문 (30') 15:55~16:25	○ (주)바디텍메드 방문 - 현장간담회 및 기업 견학 (30')	* 안내: 최의열 대표이사

참고2 행사장 구성

< 주요 행사 프로그램 >

○ 사전행사 [외부: 학생복지관 앞]

커피트럭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청년 워크넷 접속 유도 · 워크넷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안내(X베너설치) · 리플릿 활용 이벤트 '보물찾기' · 청년고용정책 홍보 영상 상영 · 커피트럭 운영 (청년정책 관련 워드 활용 커피 메뉴활용)
이동고용지원센터 운영 (풍물텐트 활용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준생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모집(위탁기관) · 청년취업아카데미 훈련생 모집(위탁기관) · 직업 심리검사 및 취업 등 심층 상담(춘천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정보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정보가 있는 강소기업 현장면접 실시 (네오플랩(주) 및 ㈜보템 등 강원지역 강소기업 인사담당자)
바리스타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가루 속에 '청년고용이' · 고용부 관계자 바리스타 역할, '청년응원용 커피' 제공

* 사전 한림대 취업지원과 및 대행사를 통한 학생 전원 문자 발송 예정

○ 공식행사 [내부: 산학관]

청년고용정책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지원제도 가이드 설명 * "청년고용지원정책! 어디까지 들어봤니?" 리플릿 사전 제공
토크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관련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10 여성가족부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

- 「2016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3~’17)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을 5월 17일(화)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확정된 2016년도 시행계획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6대 영역, 759개 과제**(중앙부처 90개, 지자체 669개)를 추진하게 된다.
 - * 소요예산 : 총 1,450억원(중앙부처 850억 원, 지자체 600억 원)

< 2016년 시행계획 6대 영역 >

-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위해 **학령기 자녀 대상 사회성 발달, 부모·자녀 관계향상, 자기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함**으로써 해외교류 및 해외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내실화하여 사업성과, 유사·중복 점검 여부 검토를 통해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내년도 시행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2016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 또한, 중도입국자녀 등의 한국어능력 및 기초학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강화 등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교과 보조교재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다문화 예비학교(100→110개교)** 및 **레인 보우스쿨(17→23개소)** 등을 확대 운영한다.
- 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등의 참여 역량강화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확대·운영**(‘15년 21천명→’16년 22천명) 할 계획이다.
- 또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75명)** 및 **차세대 무역 마케팅 전문가 육성(80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직장적응 프로그램인 **결혼이민여성 인턴제(499명)** 등을 운영한다.
- 생애주기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설계, 길찾기 등을 지원하는 ‘**정착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6개소→78개소)한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시스템**을 개통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제고**를 위해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를 확대하고,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150개교 → 180개교)하여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한다.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22개소 → 78개소)한다.
- 한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 **회의 기능**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심의·조정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법 제3조의4, 시행령 제5조)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원 : 관계부처 장관(12명)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 : 7명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붙임 2

2016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6개 과제)

- 평등한 부부 및 소통하는 가족관계 조성을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 언어·문화 이해 제고
-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 결혼이민(예정)자 및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결혼제도·문화 및 교육 강화
 -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 상대방 문화존중을 위하여 교육내용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지원
 - * 노인 등 대상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문체부)
 - 방송콘텐츠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제작 방송콘텐츠 편성·방영
 - 국가 간 수교 및 상호 교류·방문의 해를 기념한 주간 특집코너 편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의 분관형 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을 조성(2개소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의 접근성 제고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하여 공연 및 전시 추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7개 과제)

- 다문화가족 정착주기가 길어지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성장주기별 접근과 지원 필요
-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신규)
 - * (여가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多재다능 프로그램) 81개소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 구축 및 시범운영 실시(신규)
-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서비스 실시
 -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배치, 언어진단·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중언어 다문화 자녀 인재육성 강화
 - * (여가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민·관협력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 영상배포('네 꿈을 펼쳐라' 교육용 3편, 14개 언어)
 - * (교육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후속 프로그램(JUMP UP 주니어 리더스 캠프 및 원격교육) 지원(민관협력)

□ 한국어능력 향상(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를 위한 방문 한국어 교육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 * (기존) 만19세 미만 → (변경) 만 24세 이하

- 예비학교 등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표준한국어 교재(6종, 국립국어원) 지원 및 한국어 성취수준 측정 도구 보급
 - * 표준한국어 교재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후 보급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취학 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 운영 확대 및 다문화 언어지도 프로그램 보급
 - * 다문화 유치원 : ('15) 30개원 → ('16) 60개원
-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 배치 전에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확대('15년 100개교→'16년 110개교) 및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신규)
-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을 위해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확대 운영
 - * ('15) 12개 시·도 17개소 → ('16) 15개 시·도 23개소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교육부)

- 교과 주요 개념 및 어휘를 설명한 교과 보조교재 보급·개발
 - * 초등 수학, 과학 개발 및 '15년 개발한 초등 국어, 사회 보급
-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력 제고를 대학생 멘토링 지원 및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
 - * 대학생 멘토링 사업 : ('15) 4,000명 → ('16) 4,500명
-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진학상담 교육자료 개발 및 직업교육 희망 시 '직업교육 지원기관' 연계 및 수강료·실습비 지원
 - * 직업교육 프로그램 대상 확대 : ('15) 고등학교 재학생 → ('16) 중·고등학교 재학생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학교 안내' 자료를 9개 언어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인 CYS-Net을 확대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 * CYS-Net 구축 수 : ('15) 200개소 → ('16) 222개소
- 청소년동반자 확충을 통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 청소년 동반자 수 : ('15) 1,000명 → ('16) 1,044명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8개 과제)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소외계층 및 피해자 인권보호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법무부, 여가부)

-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를 위해 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사전 제공, 자본금 충족 여부, 영업행위 점검 등 단속, 조사 강화(연 2회)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입국 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현지사전교육(4개국 6개소) 운영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사항 공개 및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여가부 등)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사, 생활지도사 대상 정부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교육 추진
 - * 주택, 의료, 양육, 교육, 복지 등 정부부처 복지서비스 총괄 안내
- 한국생활 정보제공, 고충상담, 통역지원, 긴급상담 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1577-1366)” 운영
 - 상담의 질을 높이고,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담원의 처우개선 추진
 - * 13개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 새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에게 각부처·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서비스 정보안내
 - * 13개 언어로 정보매거진(Rainbow+), 정보안내 리플렛(9만부) 제작·배포
-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정보콘텐츠(워크넷, 새일센터 등) 연계 등 다누리 포털 운영 고도화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 초기 정착단계의 결혼이민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돌봄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가부·법무부간 협업*을 통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실시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와 조기적응 프로그램(법무부) 연계 : ('15) 17개소 → ('16) 25개소

□ **소외계층 지원 강화**(여가부, 농식품부)

- 다문화가족의 정착 장기화에 따른 학령기 자녀 증가 등에 대비하여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 마련 및 이행 점검(신규)
-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 * 노후·불량주택의 주방 및 화장실 현대화, 지붕 개량, 단열성능 개선, 난방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비용 실비 지원(단, 세대당 지원 600만원 이내)

□ **국제결혼 피해자 보호**(여가부)

-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운영
 -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실시(연중)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홍보 실시
 -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및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활용 홍보 및 해바라기센터, 출입국 관리소 등 홍보 책자 배포
 - 보호시설 종사자 소진 등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20개 과제)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역량개발 등 일자리 지원 및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확대(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행자부, KOTRA)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의료코디네이터로 양성하고, 수료생 대상 현업적용도, 산업활용도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및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 ('15) 44명 → ('16) 75명
- 자치단체 주도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부처가 재정지원·컨설팅 등을 지원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고용부)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행자부) 실시
- 결혼이민자 등을 채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총 272명 목표)
- 고용센터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적극 취업 알선 및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 월 80만원(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센터 내 전담인력 배치(12개소)
- 다문화 인재를 무역실무 교육 통해 차세대 무역 마케팅 전문가로 육성하고, 다문화 무역인 DB를 구축하여 채용 희망 기업에 제공
 - * 다문화무역인 선발·교육('16년 80명) 및 KOTRA 주관 수출상담회 등에 통역 및 안내요원으로 참여기회 제공

□ 직업교육훈련 지원(고용부, 여가부, 농식품부)

-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 * 결혼이민자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해 자비부담 면제 및 훈련비 연간 지원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실시 및 직장적응 프로그램인 결혼이민 여성 인턴제 운영(총 499명 목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새일센터 간 협력·연계 강화
- 결혼이민여성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맞춤형 농업교육' 실시(총 2,480명 목표)
-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 확대 및 특화 교육훈련 과정(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공공분야의 결혼이민자 활용 일자리 발굴 지속
 - * 고용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 ('15) 32명 → ('16) 40명

□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여가부, 행자부, 경찰청)

-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육 전문 강사

및 통역요원 활용,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교육 실시 확대

*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운전면허교실' 운영 내실화 및 도로교통 공단과 협조, 전문강사 확보(교육 참여 인원 총 9,980명 목표)

- 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사회참여 확대**(여가부, 행자부, 법무부)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신규)

-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 및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결혼이민자 재능기부 등 자원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양교육(4시간) 의무적 실시

- 다문화가족 간 자조모임*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출입국관리소별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지속 추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16년 22,000명 목표

** 공모를 통해 20개 지역문화재단 선정·지원(무지개다리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5개 과제)

-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 문화 조성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여가부, 행자부,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문체부, 농식품부)

-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시스템(다누리배움터) 개통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다문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일반 공무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과정 운영(25개 과정, 7,000명 목표), 지자체 다문화 업무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이민정책 이해과정 개설·운영(2회)

- 경찰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추진 및 온라인 교육 전 직원 수강 독려

- 군인업무와 상황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내부강사 육성 및 군대 내 다문화이해교육 추진(총 90회 목표)

- 다문화 시설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추진 (총 30회 목표)

-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기업의 HR담당자, 어린이집 교원(원장·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여가부,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통합 캠프를 실시하여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지원

-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과 정책관심도가 높은 홍보매체(언론방송·온라인 포함)를 활용 캠페인 및 홍보영상 송출
- 다문화 관련 TV방송 프로그램(EBS, 5개 프로그램, 237편) 제작·방송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이해제고 및 시청 편의 제공을 위해 국내 우수방송프로그램 다국어 자막 서비스 제공
- 소수문화의 문화예술 활동, 역사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문화자원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 * 온라인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콘텐츠 확대 수집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 모든 학생이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관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 운영
 - * 다문화 중점학교 : ('15) 150개교 → ('16) 180개교
- 다문화 교육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 * 다문화교육을 반영한 2015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초등 1~2학년)
- 문화다양성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전시상자 및 학습자료 '다문화 꾸러미' 개발·보급 및 교육
- 교·사대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과정' 개설 유도 및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상담, 위기학생·학업중단 지원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 확대
 - * ('15)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교장·교감 관리자 등 → ('16)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학업중단 집중지원학교 담당교사 등으로 연수 확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국방부)

- 간부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반기 1회 이상) 및 군 전문 강사 양성에 의한 부대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실시
 - * 군 전문강사 30명 추가 양성 및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16년 80회)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상 다문화 관련 보수교육 실시 및 다문화장병의 원만한 복무적응을 위한 연구 추진
- 부대개방 행사 및 각종 병영캠프에 다문화가정 초청 활성화
 - * 어린이날, 국군의날 각 군 페스티벌 등
 - * 다문화 관련 단체 대상 안보현장 방문 및 안보교육 적극 지원

(6)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8개 과제)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유사중복 조정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주요 결혼상대국가, 관련 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력 강화

□ **다양한 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여가부)

- 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확대
 - * 사업운영기관 : ('15년) 22개소 → ('16년) 78개소

□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국조실, 여가부)

- 신규사업, 계속사업 확대, 관련 법안 발의 시 다문화가족정책 실무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조정 의무화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세칙 마련('16. 3월)

- 다문화가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유사·중복사업 조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연도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세부지침 마련('16. 3월)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구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단위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유사·중복사업 개선

* 협의회 운영실적 보고 제도화(연2회) 및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여가부, 외교부)

- 주요 결혼 상대국 주한대사 협의회 실무협의 기능 강화를 통해 상시 협력체계 구축

* 구성국가(10개국)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네팔

-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교육 및 관계 공무원 워크숍 개최시 주요 상대국의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연중)

- 국가 간 제도 모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 구축 추진

*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 영사국장회의 등 계기 국제결혼 관련 문제 및 해결 방안 논의(필요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가입 권유 등)

11 국토교통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 시작 -6월 3일까지 접수...올해 신설된 케이티엑스(KTX) 지역경제거점형도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인 이번 공모는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 투자선도지구는 '15.1.1일 신규 시행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된다.

* (참고) '15년도 투자선도지구 선정현황

(발전촉진형 : 2개소) 전북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거점육성형 : 2개소) 강원 남원주역세권개발,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관련 시설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

구분	발전촉진형(발촉형)	거점육성형(거점형)
혜택	재정지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 특히, 올해에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을 신설하였다.

○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KTX역 중 **약 1~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앞으로 이를 타 지역에 확산할 계획이다.

* (예시) 복합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거점지역으로 복합 개발(교통, 도시·지역개발 사업 등과의 융복합)

□ 올해 6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올해 8~9월경 투자선도지구 5개소 내외**(구체적인 개수는 변경 가능)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

2016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계획(안)

□ (지정계획)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총 5개소 내외 선정**(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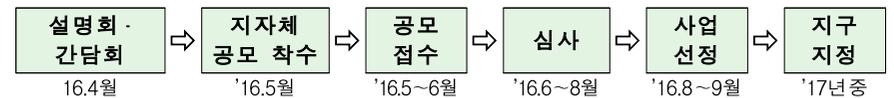
- * 시범지구에 대한 평가, 지자체 수요를 검토하여 '17년까지 지속 확대 지정
- 민간투자·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기존 지역개발사업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지정요건) ①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② 성장잠재력 ③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④ 파급효과 ⑤ 지역생활권 거점 ⑥ 민간투자 가능성

유형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	(KTX지역경제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면적	3만㎡ 이상	10만㎡ 이상	면적기준 無

*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 (선정절차)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16.8~9월)하고, 선정된 사업별로 지구 지정('17년중) 절차 진행



□ (지원사항)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촉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발촉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국비지원(발촉형) 등 종합지원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 결정

12 해양수산부

나들이철,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단속한다

-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스쿠버장비 사용 등 중점 단속 예정 -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한다는 뉴스에 산과 계곡 등 나들이를 계획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하천, 계곡, 댐, 저수지 등에서 동력보트를 타거나 투망, 작살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내수면은 수산자원 서식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위와 같이 유어행위를 할 경우 과도하게 어획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더욱이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 한 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업인의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유어행위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유어행위 위반 적발 건수 : ('10) 17건 → ('13) 60 → ('15) 55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나들이철 내수면 유어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주관), 경찰서, 내수면단체, 어업인 등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어객이 몰리기 시작하는 6월 초부터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에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등 유어질서 위반 △배터리, 유독물, 무허가 어구 사용 △내수면 양식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행위 등 유어질서 및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을 각 시·도에 알리고, 시·도에서 동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구에 알리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내수면 어업인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어업질서 조성을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관계법령 위반사항	벌 칙	비 고
▷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어업, 공동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무허가어업 - 자망어업, 각망어업, 종묘 채포어업, 패류채취어업, 연승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무신고어업 - 면허.허가어업이외의 어업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조
▷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조
▷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지역은 제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포획 금지채장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명시되지 않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